

# “1조2000억 규모 인공태양 입지, 나주 최종 확정”

한국연구재단, 전북 이의신청 ‘불인정’

전남도·나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예정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입지가 나주시로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입지 평가에서 2위를 한 전북특별자치

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10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날 전북도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정성에 이상이 없다’며 불인정 취

지의 결과를 통보했다.

재단은 공문에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는 공고된 사업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해 실시했으므로 공정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입지 선정 결과 발표에서 최고점을 받은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국산단 일원을 최종 연구시설 입지로 낙

점됐다.

이 일대는 100만m<sup>2</sup> 이상 평탄지로 공모 조건(50만m<sup>2</sup>)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부지 전체가 견고한 화강암 지반으로 구성돼 있고 최근 50년간 지진 등 자연재해 기록이 거의 없는 점이 큰 강점으로 평가됐다.

핵융합 연구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연구시설 조성 이후에는 약 300개 기업 유입, 최대 1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10조원 이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연구시설 조성·운영 기관인 과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조만간 전남도, 나주시와 연구시설 부지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태양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

들어지는 원리를 모방,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바다에 있는 중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무궁무진하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고갈 위기의 회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도·목포대·순천대 “대학통합·국립의대 신설 총력” 전남도는 10일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와 함께 대학통합 및 국립의과대학·국립대병원 신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대학이 지난해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이후 교명 선정과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대학통합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 추진의 안정적 이행과 정부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관계 부처·국회·정당 등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향후 통합대학과 함께 실질적인 개교 준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운전면허시험장서 자율주행차 시험·평가 한다

최첨단 VR시험장·주행코스 등 갖춘 ‘AI센터’ 구축

2027년말 개관 목표…교통·안전 신기술인증 제공

광주 북구에 건립 중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자율주행차 시험과 평가가 가능한 최첨단 시험장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총 사업비가 기준 370억원에서 82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증액된 82억원에는 공사원과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 79억원(감리비 30억 원, 건축공사비 49억원)과 AI센터(모빌리

m<sup>2</sup> 규모 건립, 2027년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광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AI 모빌리티 시험·평가·인증이 가능한 ‘AI모빌리티 인증센터’도 새로 구축된다.

‘AI센터’는 정보기술(IT) 기반 운전면허평가시스템과 가상환경(VR) 평가시험장이 도입되며, 시험장 내 주행시험 코스를 활용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체계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자율주행차의 주행능력 평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험장, 3단평 규모의 자율주행시험장(PG) 조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전문가 양성센터, 미래

교통안전시설시험연구센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인증·시험·평가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AI 모빌리티 인증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자율주행차, 실의 이동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뿐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 사업자에게 신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설향자 시 교통운영과장은 “운전면허 시험장이 개관하면 면허시험과 간신을 위해 나주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 성장화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2·29 제주항공 참사’ 조사위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 전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항철위를 기준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했으며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철위가 항공·철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사 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항철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정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정부, ‘해상풍력 확충·보급 계획’ 발표

### 2030년 10.5GW 확대…목포신항 기반시설 확충

#### 지원 부두 2→4선석…해남화원산단, 항만시설 지정 추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5GW(기기와트), 2035년까지 25GW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해상풍력 유일한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 지원부두를 늘리고 해남화원산단지 등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을 항만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83.2GW(준공 기준)에서 2034년 441GW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 설비용량이

2030년까지 10.5GW, 2035년까지 25GW로 늘리는 동시에 발전단지는 2030년까지 1㎿(킬로와트시) 당 250㎿ 이하, 2035년까지 15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상업 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으로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곳(104곳·35.8GW)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2030년에는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기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풍력 지원 향만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 여력은 연간 0.6GW 정도다.

구체적으로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2선석에서 4선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해남화원산단지 등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시설을 항

만시설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으면 10개 부지에서 28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별로 인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입찰 시 군·작성전 협의를 거친 사업만 참여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는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 수용성을 높이는 방면으로는 어민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 소득 미يل’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도의회,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16일 의결 유력

전남도가 국비 28억원을 확보해 장흥 보림사 일원의 쇠퇴해진 비자림 복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보림사 일원 비자림은 신라시대 창건 당시 식재돼 울창한 숲을 이뤘다는 통설이 있으나 과거 사찰 축조용으로 이용되고, 주변 생태계 변화로 쇠퇴해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다.

비자림 복원은 총 30ha 규모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28억원과 지방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보림사, 문화유산청, 장흥군, 복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타당성평가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통해 복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16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역연합 추진은 새 정부의 ‘5·3특’ 정책에 따라 8월 광주·전남도와 양 시·도의회가 출범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규약안 마련 등 절차가 진행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 의결을 보류했다. 당시 도의회는 △출범 일정의 속도 △양 의회 의원 정수 차이에도 동일한 연합의원 구성 △도내 지역 의견 차이 △지방선거 이후 출범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예산 15억원도 삭감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관련 예산도 승인했다.

5·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지역별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정부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민주당 호남 예산’서 계속

이율리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이제 명 대통령이 맡은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현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와 지도부, 호남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김관영 전북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참석한 가운데서 최대 규모의 내년도 호남권 예산 내역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이어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중 호남관련 반영 및 증액’ 등의 성과를 나열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확보했는데 이렇게 시작해 2027년에는 좀 더 발전시키고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엔진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인공지능 전환(AI), 우주미래자, 사회기반시설(SOC) 등 굵직한 사업에 대해 5·18 관련 예산, 기초생활 및 안전 분야 등에도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광주가 국가 AI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선정된 광주에서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이어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예산안 중 호남관련 반영 및 증액’ 등의 성과를 나열했다.